

「해사안전법」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

< 부산청 선원해사안전과 >

□ 개정 의의 : 안전은 강화하되, 행정절차는 간소화 (민원 편의 증진)

□ 「해사안전법 시행령」 개정사항 요약

연번	조문	주요내용	시행일
1	제15조제1항 제3호 [신설]	※ 안전관리체제 수립 대상 선박 추가 -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준설선(浚渫船)	‘17.01.31.
2	제16조 별표3 [개정]	※ 내항선의 안전관리(책임)자 면허요건 강화 - 5급 해기사 ▶ 4급 해기사로 상향	‘16.12.30.*

*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한 경과조치 : 現 안전관리(책임)자는 ‘19.12.31.까지 유예함(신규 안전관리(책임)자는 4급 해기사 면허 적용)

□ 「해사안전법 시행규칙」 개정사항 요약

연번	조문	주요내용	시행일
1	제34조 제1호 신설	※ 인증심사 신청 시 구비서류 추가 및 유예 - 해상화물운송사업,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 등 구비서류 추가 - 단, 인증서(DOC/SMC)를 교부받기 전까지 유예	‘17.01.03.
2	제37조 제4호 개정	※ 인증심사 면제대상 선박 확대 - 외국에서 선박 수입 후 외국에서 다시 외국으로 수리·검사를 위하여 항해하는 경우	‘17.01.03.
3	제47조제1항 제1호 바목 신설	※ 안전관리대행업 (변경)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추가 및 유예 등 - 해상운송사업 등록증 등 구비서류 추가 - 단, 대행업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까지 유예 - 민원처리기간 단축(신규-14일, 변경 5일)	‘17.01.03.
4	제47조 제4항 신설	※ 안전관리대행업 변경등록 기한 설정 - 변경등록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	‘17.01.03.
5	제31조 별표10 개정	※ 선박출항통제기준 완화 대상선박 삭제 - ISM 인증심사에 합격한 선박을 출항통제 완화 대상에서 삭제	‘17.07.04.
6	제33조 별표11 개정	※ 일부 선종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요건 강화 - (압향예부선) 자체운항통제기준 요건 추가 - (예인선) 안전관리자의 매월방선 요건 추가	‘17.07.04.

* 규칙 별표10의 선박출항통제 기준 개정사항은 법제처 참조

붙임 : 「해사안전법」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설명자료 1부. 끝.

[주의 사항]

「해사안전법」 제46조에 따른 ‘안전관리체제’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및 제51조에 따른 ‘안전관리대행업’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개정된 동법 「시행령」 및 「시행규칙」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, 귀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 개편, 민원신청 등에 반드시 반영하시어 법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「해사안전법 시행령」 개정사항

① 안전관리체제 수립 대상 선박 확대

《 개정 조문 》

※ 제1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준설선(浚渫船)

- (개정내용) 안전관리체제 수립 대상 선박에 ‘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준설선’을 추가
- (개정이유) “500톤 이상의 준설선”은 국제협약에 따라 안전관리체제 대상 선박으로 그동안 국내 해당 사례가 없었으나,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선박을 수립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제항해를 통하여 해당 선박이 외국 항만공사에 투입되는 등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
- (시행일) ‘17. 01. 31.

* (적용참고) “500톤 이상의 준설선”은 「해사안전법」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의 예인선의 적용과 같이 「해운법」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有無와 관계없이 안전관리대행업 등록 및 인증심사 신청이 가능한 선박임

② 내항선 안전관리(책임)자 경력기준 강화

《 개정 조문 》

※ ‘별표 3’ 자격기준의 경력기준의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(이하 “내항선”이라 한다)의 사업장란 중 “5급 항해사, 5급 기관사 또는 5급 운항사”를 “4급 항해사,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”로 한다.

- (개정내용) 내항선 ‘안전관리책임자’ 및 ‘안전관리자의’ 경력 요건 中 해기사 면허를 “5급 이상”에서 “4급 이상”으로 상향

- (개정이유) 5급 해기사 면허는 안전관리체제의 주요 대상이 되는 선박(화물선 등)의 승무 경력 없이도 취득이 가능함에 따라 안전관리체제 대상이 되는 선박의 승무 경력을 갖춘자가 안전관리(책임)자가 될 수 있도록 경력기준을 현실화

- (시행일) ‘16. 12. 30. (단, 現 안전관리(책임)자는 ‘19.12.31.까지 유예함)

☞ (적용방법) 現 안전관리(책임)자 인정기준 : ‘16.12.30. 이전에 교육경력을 만족하고, ‘16.12.30. 이전에 안전관리(책임)자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자. 만일 안전관리자가 17.01.01. 이후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려는 경우에는 4급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

* (참고) 해사안전법 시행령 부칙 제2조(경과조치)

제2조(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자격기준의 강화에 관한 경과조치)

이 영 시행 당시 선박소유자가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내항선 사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해당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다만, 선박소유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내항선 사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
② 「해사안전법」 시행규칙 개정사항

①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 時 구비서류 추가 및 유예

《 개정 조문 》

※ 제34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공통 제출서류: 「해운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등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·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. 다만, 인증심사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.

- (개정내용)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 시 해당 선박이 기재된 '해상 여객·화물 운송사업등록증(운항선박명세 포함)' 또는 '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'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. 단, 인증심사에 합격한 이후 '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' 또는 '선박안전관리증서'를 교부받기 전까지 관련 등록증 제출을 유예할 수 있음

* 「해사안전법」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및 3호의 예인선, 준설선 등의 선박 심사 신청 시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은 不要하나, 안전관리대행업체에 위탁하여 관리되는 선박의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함

- (구비서류를 추가한 개정이유) 인증심사 시 안전관리체제 적용 대상 선박 유무를 명확히 하고, 안전관리대행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신고 의무를 확인하여 선박의 불법 운항을 미연에 예방

* 「해운법」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대상 선박이 미등록 상태에서 및 위탁 관리 선박이 안전관리대행업 미등록(미신고) 상태에서 인증심사에 합격하여 불법 운항 하거나 불법 운항 中 해양사고 발생 사례 발견

- (구비서류 제출을 유예한 개정이유) 해운업 등록(처리기간 9일) 및 안전관리대행업 등록(처리기간 20일) 이전에 인증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인증심사 계획 수립 등 선박 운항을 조기에 정상화하여 선사의 경영을 지원하고자 함

- (시행일) '17. 01. 03.

☞ (적용방법) 해상 여객·화물 운송사업 등록 이전 및 안전관리대행업 등록 이전에 인증심사를 신청하고 인증심사를 받을 수 있음. 하지만 인증심사에 합격하더라도, 해상 여객·화물사업 등록 및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이 완료되어 인증심사기관에 등록증을 제출하여야만 인증서가 교부됨

② 인증심사 면제 대상 선박 추가

《 개정 조문 》

※ 제37조제4호 중 “국내”를 “국내(국내항으로 입항 전 수리·검사 등을 위하여 외국항으로 항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- (개정내용) 외국에서 선박 구입 후 국내항으로 입항하기 이전에 수리·검사를 위하여 다시 외국으로 항해할 경우에도 인증심사 면제
- (개정이유) 선박 수입 시 수리 비용 등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여 외국에서의 선박의 수리 및 검사를 위한 항행을 원활히함
- (시행일) '17. 01. 03.

☞ (적용방법) 개정 이전에는 외국에서 선박 구입 후 국내로 항해할 경우에만 인증심사가 면제되고 다시 외국으로 항해할 경우에는 인증심사를 받아야 했음. 동 개정으로 선박 수입 국가의 여건으로 수리·검사가 불가능(어려운)한 경우 또는 수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수리·검사를 위한 제3국 경유가 인증심사 절차 없이 가능하게 됨

③ 안전관리대행업 구비서류 유예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

《 개정 조문 》

※ 제47조제1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를 대행하려는 선박이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
· 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. 다만,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.

※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처리기간	신규등록 14일
	변경등록 5일

- (개정내용) 안전관리대행업 신규·변경 등록 시 해상여객·화물 운송사업 등록증을 구비서류로 법제화하되, 대행업 등록증 교부 이전까지 유예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(신규 14일, 변경 5일)함

- (개정이유)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신규선박 도입에 필요한 행정 절차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선박이 조기에 운항할 수 있도록 함

- (시행일) '17.01.03.

☞ (적용방법) 동 개정으로 해상 여객·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발급 이전에도 안전관리대행업 신규·변경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시행 규칙 제34조 개정으로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 없이도 인증심사를 받을 수 있음에 따라 제반 행정절차(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절차 등)와 선박 심사를 동시에 진행이 가능함

* (개정이전) 선박수입 ► 해상운송사업등록(9일) ► 안전관리대행업 등록(20일) ► 인증심사신청 ► 선박심사 ► 인증서교부

* (개정이후) 선박수입 ► 인증심사신청 ► 선박심사 ► 인증서교부(교부 전에 제반 서류 발급여부 확인)

④ 안전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 기한 설정(30일 이내)

《 개정 조문 》

※ 제4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- (개정내용) 안전관리대행업 변경등록* 신청(신고) 기한을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로 의무화함

* 안전관리대행업자의 변경등록 의무(시행규칙 제48조 관련)

1. 상호 및 주소 : 사업장 이전 및 사업장 명칭 변경 등
2. 대표자 :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대표이사 변경 등
3. 안전관리대행 선박에 관한 변경 : 대행 선박의 삭제, 신규 대행 선박의 추가, 대행 선박의 총톤수, 선종 및 항행구역, 선박소유자 및 선박운항자 등 중요한 대행 선박 명세의 변경 등

- (개정이유) 변경등록 의무에 불구하고 장기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근거를 명확히 함

- (시행일) '17.01.03.

☞ (적용방법) '17.01.03. 이후부터는 안전관리대행업자가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「해사안전법」 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하여 행정처분* 실시

* 행정처분 기준(영업정지 시 DOC의 효력이 정지됨)

- 1차 위반 : 개선명령 (변경등록 의무 이행 명령)
- 2차 위반 : 영업정지 1개월
- 3차 위반 : 영업정지 3개월
- 4차 위반 : 등록 취소

⑤ 예인선의 안전관리체제 요건 강화

《 개정 조문 》

※ 별표 11 제2호 비고란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카목3):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선박 방문 및 확인에 관한 사항

- (개정내용) 예인선의 안전관리체제 수립·시행 시 안전관리(책임)자의 매월 방선의무를 신설함
- (개정이유) 해양사고 취약 선박인 예인선에 안전관리자의 매월 방선의무를 신설하여 예인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자 함
- (시행일) '17.07.04.

☞ (적용방법) 예인선을 관리하는 사업장은 '17.07.04. 이후 매월 안전관리(책임)자가 선박을 방문하여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함

⑥ 압항예부선의 안전관리체제 요건 강화

《 개정 조문 》

별표 1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선박은”을 “선박(추진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결함하여 운항하는 압항예부선은 제외한다)은”으로 한다.

- (개정내용) ‘압항예부선’의 안전관리체제 수립·시행 시 예인선과 동일하게 ‘자체운항통제’ 기준 관련 사항을 적용함
- (개정이유) 최근 기상 악화 시 압항예부선에서 침몰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양사고 증가함에 따라 압항예부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함
- (시행일) '17.07.04.

☞ (적용방법) 압항예부선을 관리하는 사업장은 '17.07.04.까지 자체운항통제기준(운항 중 피항 등)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